

# 간판·메뉴에 ‘마약’ 못쓴다...소상공인 “대책 마련 먼저”

### 광주·전남에 수 백개 업체...정부, 7월부터 행정처분 예고 상인들 “취지 공감...간판·메뉴판 교체비 정부가 지원해야”

오는 7월부터 ‘마약빵’, ‘마약계란장’, ‘마약국밥’ 등과 같이 제품 이름과 상호에 마약 관련 용어를 쓸 수 없다.

‘마약’ 단어가 포함된 상호나 제품 이름을 지어 수년간 영업을 해온 광주·전남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배랑 끝으로 내모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5일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영업소의 간판, 메뉴명, 제품명 등에 마약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증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일상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상호·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광주·전남 지역 일부 소상공인들은 법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 문구를 ‘중독성이 있고 맛있다’라는 의미로 수년간 사용했지만 상호와 제품명을 바꾸게 되면 기존 고객들이 끊기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마약 관련 상호·제품·메뉴명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광주 6곳(서구 1곳, 북구 3곳, 광산구 1곳, 남구 1곳), 전남 7곳이다.

하지만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결과 훨씬 많은 수의 업체가 ‘마약’을 사용한 상호·제품·메뉴를 사용하고 있었다. 배달이플리케이션과 네이버 등에 검색하면 수백개 업체에 달했다.

이들 영세상인은 법령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온다고 하소연한다. 간판 교체 비용만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이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마약’ 상호를 사용한 프



광주의 한 반찬가게와 빵집에서 ‘마약 계란장’과 ‘마약 빵’ 등 마약이 들어간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54)씨는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가 마약이라는 상호명에 이끌려서이고 이름의 효과도 특목비 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호명을 바꿔야 한다니 당황스럽다”며 “장사하는 입장에서 ‘마약’ 상호명은 실제 마약은 아니지만, 맛있는 음식을 연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사회적 통념은 이해하지만 대책과 조울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

다.

동구 산수동에서 ‘마약○○○’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양석(42)씨는 “이름에 중독성이 있어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 기대해 직접 상호명에 마약을 붙였다”며 “마약이라는 상호명으로 가게를 기억하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상호명을 다시 생각해야 해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목포에서 마약 이름이 들어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63)씨는 “지자체에서 지침 등이 내려온 게 없어 법이 바뀐 줄도 몰랐다. 당장 5개월 내에 간판이며 메뉴판을 바꿔야 한다니 당황스럽다”며 “간판 교체비용도 큰 부담”이라고 했다.

당장 5개월 내에 상호명 등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이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정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식품진흥 기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시민들은 대체로 이번 정부 규제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조규정(80)씨는 “마약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마약 상호를 붙여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봤을 때 인상이 썩어졌다. 마약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정부 규제를 환영했다.

/글·사진=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보육 대체교사 고용 보장”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광주시가 보육대체교사 대량 해고를 통보한데 따라 노조가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총 공공연대노조조합은 30일 광주시청에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보육 대체교사 해고 중단과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광주시는 지난해 8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 맺은 4자(광주시, 광주시의회, 광주사회서비스원, 공공연대노동조합)합의를 무시하고 올해 2월까지 총 62명의 기간제 노동자 전원 해고를 예고했다”면서 “보육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광주시의 ‘비담임교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예산없는 비담임교사 확대는 보육의 공백을 키울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인력 충원과 부족한 예산으로 시작하는 비담임교사제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전통시장 골든타임 확보 훈련 30일 광주광산소방은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송정5일 시장 일대에서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진행했다. <광산소방 제공>

## ‘미국 동물원 독수리’ 광양까지 비행? 멸종위기 2급 대머리수리, 덴버 동물원 인신표 달린 채 구조

광양에서 미국 덴버 동물원 인신표가 달린 독수리가 발견됐다.

30일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따르면 전남 낮 12시 20분께 광양시 광양읍의 한 도로에서 독수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개체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2급 조류인 대머리수리(사진)로, 발견 당시 날지 못할 정도로 부상이 심했다.

센터는 독수리가 전선 등과 충돌해 오른쪽 관절이 탈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수리의 발목에는 미국 덴버동물원의 인신표와 함께 “발견 시 연락을 바란다”는 문구가 영어와 몽골어로 쓰여 부착돼 있었다.

센터 연구진은 “몽골 지역에 서식하던 독수리가 겨울철 식량을 찾아 남하하던 중 광양에 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신표는 몽골 지역 독수리를 연구하던 덴버 동물원 연구팀이 부착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견된 개체의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치료를 통해 회복을 도울 예정이며, 덴버동물원에 연락을 취해 방생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민 기자 kdi@

## “목포-순천대 ‘공동 단일 의과대’ 대승적 결단 환영” 전남사회복지협의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으로, 의료취약지가 많고, 어르신 비중이 커서 의료수요가 높은 반면, 의사 수는 물론 의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 의료 기반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면서 “두 대학의 결단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과 절실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사회복지협의회는 이어 “두 대학은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한 ‘공동 단일의과대학’이 설립되

는 날까지 총력을 다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로 화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 22일 공동으로 의과대학을 신설 운영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와 함께 두 대학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동 의과대학 설립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어용노조 설립 의혹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압수수색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에서 불거진 ‘어용노조’ 설립 의혹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이날 오전 어용노조 의혹이 있었던 ‘새롬노조’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청은 광주시 광산구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관계자 주거지에 근로감독관 20여명을

보내 새롬노조위원장의 숙소와 집무실 등을 수색했다.

새롬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출범해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제1노조로 자리잡았다.

앞서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빛고을의료재단이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새롬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